



조간 제791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음력 7월 3일)

“호남발전 디딤돌 마련 지역민 체감할 변화 만들겠다”



광남초대석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 달 초 전당대회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 그리고 지역발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출발점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국가 계획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소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지도부에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정청래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 대표의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다”라는 표현에는 호남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호남발전특별위를 새롭게 출범시켰고,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는 호남의 오랜 숙원과 지역 현안을 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분명한 약속이라 생각한다.

최고위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담아 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

향후 위원회는 이번 달 중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 및 분과별 회의, 시·도별 정책 설명회를 연 뒤, 가급적 11월말까지 당 대표에게 보고하는 최종 정책안을 도출하겠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 호남의 목소리를 더 넓고 깊게 담아내고,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며, 호남발전의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

-호남발전특별위에서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 외에 담을 지역발전 방안이 있다면?

△문화·관광·체육, 신산업·경제·금융, 기후·에너지·재난안전, 메디컬·바이오·헬스케어, 도시·교통·인프라, 초광역 협력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회의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교통인프라 호남권 아젠다 핵심 11월까지 최종 정책안 도출해 당 대표에 보고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간 신뢰·발전방안’ 중요

아울러 호남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주며,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호남발전특별위 목표와 운영 방안은?

△호남발전특별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지난달 8일 민주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당시 “호남의 승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정 대표의 지시로 호남 숙원 해결과 지역발전 대책 논의를 위해 당의 상설 특별 기구로 신설됐다.

정 대표가 강조한대로 민주당이 호남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까지 폭넓게 참여해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특위의 가장 큰 목표다.

지난달 21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관련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호남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5극3북’ 균형성장 정책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디테일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호남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광주와 전남, 전북의 지역별 발전 방안을 호남발전 아젠다로 채택할 것이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 속에 녹여내 호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이 대통령 주관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6자 TF(테스크포스)’가 꾸려졌는데 과제는?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소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TF 논의를 통해 각 지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전 대상 지역과 종전 지역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해야 한다.

다만 현재 TF는 이제 막 출범한 초기 단계이다. 향후 구체적인 논의와 진전이 이뤄지는 대로, 그 결과를 해당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며는 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서 의원과 김산 군수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6자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 TF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통한 갈등 제기는 오히려 논의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현행 ‘기부 대 양여’ 중심의 체계와,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 맡긴 현행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으로는 이전이 어렵다.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 방안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책임 있게 주도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6자 TF’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

용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속한 대로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우선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간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는 전남도와 체결한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지난 2000년 당시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무안공항 접근 교통망을 확충한 뒤 광주공항의 국내선 수요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단순한 지자체 간 합의의 차이를 넘어, 이미 국가 기본계획 속에서 추진돼 온 사업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 그리고 지역발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국가 계획에 부응하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전남 농업을 살리는 모책은? △호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곡창지

대로, 국가의 식량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민생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추진했고,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 정상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 7월과 8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법’ 등 ‘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산비 보장과 가격 안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제가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안으로 반영된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 가격안정제’를 포함해, 앞으로 어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다. 앞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단가 상향과 신규 제도 도입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회 입법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 전남 농업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지역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이는 당장의 현실로 지금 이대로라면 지역소멸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광주·전남 지역 공약으로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미래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호남을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비전이다. 아울러 전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할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그리고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절실한 현안이다.

신재생에너지와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농어업 등 호남 고유의 강점을 살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23년, 광주·전남 의원으로는 22년 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호남 공약과 지원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전남의 유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의 전남 공약을 세심하게 구성하고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호남발전특별위 위원장으로서, 이미 약속된 지역 현안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삼석 의원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특별위 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폭우 피해를 입은 나주 현장에서 수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